

#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전개

이 홍 구

대통령정치담당특보

항상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는 전환기라 하지 않을 시기가 없겠으나 1990년대는 그야말로 큰 전환기라 하겠다.

1989년 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라파에서는 지난 70여년간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던 맑스·레닌주의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대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우리시대를 '역사적 전환기'로 만들었음은 물론 지난 45년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냉전시대의 종언을 가까이 다가서도록 했다. 즉, 냉전의 주체인 소련과 미국 양나라가 이전까지의 대결형태로부터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들어감으로써 냉전체제는 점차 종결지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는 다양화, 다원화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 다원화의 시대에 있어서도 평화와 번영은 쉽사리 이룩될수 만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89, 90년 동안의 사건들을 통해 쉽사리발견할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대전은 없을지라도 지역적 분쟁과 그 분쟁을 둘러싼 국지전이 일어날 수있다는 것을 페르시아만, 이라크사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국지전의 가능성에 못지않게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다양화, 다원화시대로 접어들며 훨씬 치열해진 경제적 경쟁이다. 전환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적응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경쟁관계에의 적응 일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현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과 특징을 국지전 분쟁의 가능성, 경제적 갈등과 경쟁의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

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일 것이다.

미국은 냉전체제가 존속하는 동안 자유진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다양화·다원화된 세계속에서 역시 계속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로 남아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중추적 역할의 미국의 경제적 입장이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력은 과거와 달리 스스로의 역할담당에 필요한 자금과 자원을 모금하고 후원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한 상황의 일례로 페르시아만사태에 대처할 자금지원을 요하는 특사를 한국에까지 파견한 사실을 들 수 있으며 세계최강국이라는 국가가 자국의 외교정책수행을 위해 각국을 돌며 자금모금을 한다는 것은 진정 새로운 양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 등으로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원칙에 의해 개방했던 방대한 시장을 폐쇄하기 시작하였으며 슈퍼 301조는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와 냉전체제가 종결을 고했다고 해서 희망과 긍정만의 새시대가 열리는것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불안정과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마디로 오늘의 세계는 전환기속에 새질서를 모색하는 시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국가는 개별·집단적으로 새질서를 모색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하는 자국의 생존방향을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의 대처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우선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효율적 외교정책의 수립이 되겠는데 지난 2~3년간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외교의 정상화' 노력이라 요약할수 있다. 이는 곧 주변국인 중국, 소련, 일본과의 정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대통령의 방일, 북방정책을 통한 한중무역대표부의 설치 등은 그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교정상화의 의의는 우리의 안전보장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새질서속에 한국전쟁이래 그 기능과 권한이 약화되고 있는 국제연합이 다시 중요한 기구로 등장하고 있다. 이라크·쿠웨이트사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틀을 UN이 제시하고 있으며 UN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외교노선의 일환으로 UN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UN가입에 대해서 남북한간에 이견이 있으나 UN의 대표권을 얻는 것은 전환기의 적응의 경쟁속에서 우리민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새질서

를 만드는데 있어서 UN의 강화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UN강화의 문제 못지 않게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느냐는 것이다. 이미 냉전체제가 종식된 현전환기의 가장 뚜렷한 성격으로 적나라한 경제적 경쟁을 들었지만 이 경쟁은 참으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이런 경제적 갈등과 경쟁을 하나의 질서의 틀속에 포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GATT체제가 지금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GATT체제속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협상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우리국민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떻게 확립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환기속에서의 관심의 표명일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볼때, 비록 상대적 개념일지라도 한국은 대국에 둘러싸인 작은나라라 볼 수 있다. 12억 인구의 중국에 비해 광활한 국토의 소련에 비해,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경제력이나 막대한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으로서는 새질서가 보다 빨리 확립되고 그 질서가 유지될 때에만이 안정과 번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UN을 통한 국제기구체제가 확립되고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국제경제질서의 빠른 확립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의 적응경쟁속에 한국이 수행해야할 기본과제로서는 첫째, '민주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으로 민주공동체란 국민이 함께 참여, 성취하고 그 결과의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 할 것이다. 둘째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작업을 들 수 있으며 이차에 걸친 남북총리회담 등은 지난 45년의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이러한 작업과 더불어 놓여진 과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 지정학적으로 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로서는 새국제 질서를 만들어 그 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외에는 살길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인접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소련·일본의 관계를 들어 '외교의 정상화'로 전술한 바 있다. 거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이웃으로 만들어, 한 공동체로서 발전해나 가야 될 시대에 도달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하나의 지역이 어떻게 하나의 이웃으로 더불어 번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보기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의 부의 분포를 볼때에도 되도록 빨리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

어야 할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세계의 총생산 즉, 세계각국의 GNP를 합산하면 20조불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가운데 미국이 5조를 차지하고 E·C 중심지역이 5조를 차지하여 미국과 E·C가 세계의 부의 반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0조중에서 일본이 약 3조불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2천억불을 조금 상회하는 선이다. 이러한 분포를 볼 때 우리가 아시아의 나라들과 힘을 합하여 하나의 번영의 기틀을 보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21세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기틀을 90년대에 꼭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제주도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심이 될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마침 이러한 때에 제주대학교에서 동아시아연구소를 설치한 것은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금번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는 단지 제주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사회가 세 공동체를 만들어 험란한 외세를 개척하는데 공헌하는가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의 하나의 지적인 핵심으로 이 연구소가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